

2000년의 시점에서 본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윤 영 관

1. 변화의 동력: 세계화와 냉전종결

2000년대가 시작되었다. 숫자를 통한 인위적인 시간의 구분과는 달리 이 시대의 삶의 특성을 과거로부터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분 짓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가질 수가 없다. 새 천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국제관계는 어디쯤에 와있는 것인가? 과거로부터 무엇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수많은 국제적인 사건과 현상들의 의미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조망해보고 변화와 연속성을 규정짓는 일은 어렵지만 한 번은 시도해보아야 할 작업이다.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관계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의 관점과 철학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神)이 아닌 이상 인식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론(理論)’이라는 것들도 결국 일면적(一面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현상을 놓고 설명하는 이론들이 제각기 다르고, 한 때 가장 설명력이 있어 보였던 강력한 이론도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약화되기 마련이다. 국제관계에서 무엇이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또는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관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론적 입장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결론과 해석을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국제관계의 변화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두 사건을 중심으로 변화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주관적인 문제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되는 두 현상, 즉 세계화와 냉전 종결을 선택하였다. 이 두 사건들이 과연 국제관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국제관계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세계화와 국제관계의 변화

1) 자유주의자들의 관점^{i[1]}

국제관계가 질적(質的)으로 변화한 것 아닌가하는 질문은 우리가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아니다. 이미 1세기도 넘는 오래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져왔고 그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이어져왔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의식은 과학,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시장(市場)이 확대되고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과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어,^{ii[2]} 영토성(領土性)과 배

타성(排他性)을 전제로 하는 근대국가 중심의 국제관계의 본질이 변화한 것 아니냐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질문은 시대에 따라 다른 어휘를 빌려 제기되어 왔으나 문제의식은 동일하였고 지금도 그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과 20세기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의 선도를 달리던 영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심화되어 상호의존이 강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에인젤(Norman Angell) 경은 근대국가들은 이제 너무나 긴밀하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그의 저서에서 주장하였다.^{iii[3]}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개진된 뒤 불과 수년 후에 1차대전이 발발했고, 국제관계는 여전히 국민국가들간의 갈등과 전쟁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1960년대 다국적기업 활동의 번성을 목도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버논(Raymond Vernon)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위력 앞에 근대 국제질서의 주축인 “주권국가들이 갑자기 별거벗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으며 “국가 주권이나 국가 경제력과 같은 개념들이 신기하게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로 그의 유명한 「주권의 한계(Sovereignty at Bay)」라는 저서를 시작하고 있다.^{iv[4]} 버논과 함께 모스(Edward Morse)나, 쿠퍼(Richard Cooper)도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비국가(非國家) 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한 초국가적 관계(transnational relations)의 증가가 국제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v[5]} 이들은 대체적으로 초국가적 접촉의 증진으로 국민과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타국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촉진되고,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다원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소 다른 이론적인 맥락이긴 하지만 호프만 (Stanley Hoffmann)교수도 핵무기와 같은 새로운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정치의 게임의 규칙이 바뀌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vi[6]}

1970년대에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적은 아마도 코헤인(Keohane)과 나이(Nye)의 「권력과 상호의존(Power and Interdependence)」이라는 저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vii[7]} 한때 버논 교수를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지적(知的)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 있던 나이와 그의 동료교수 코헤인은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해오던 이른바 현실주의 이론의 설명은 국제관계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초의 고정환율 체제의 붕괴, 석유파동,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가, 경제영역의 부각 등 여러 가지 현상을 목도한 이들은 국제정치는 상호의존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설명되지 않고서는 안될 정도로 변화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知的) 전통의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군(一群)의 학자들은 세계화 현상으로 국가의 주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마에 켄이치는 세계경제에서 국민국가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못한, 더 나아가 역기능적인 행위자로 변하고 말았으며 경제활동에 관한 의미있는 단위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viii [8]} 라이시(Robert Reich)도 “국민적인(national) 상품이나 기술, 국민적 기업, 그리고 국민적 산업”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국민경제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ix[9]}

이들은 세계화 현상은 정치 외적(外的)인 요인, 즉 과학, 기술, 교통, 통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

고 그에 힘입어 시장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됨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세계화를 자체적인 작동논리를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로 간주한다.^{x[10]} 세계화의 진행 자체를 국가가 정치를 통해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xi[11]} 이것이 세계화에 의해 주권국가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이러한 주권 국가의 약화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즈노(Rosenau)교수는 “세계화 과정이 다가오는 세계질서의 조건을 결정하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xii[12]}

물론 새롭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계 질서가 낙관적인 것이냐 비관적인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세계화가 시장기능을 확산시켜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노동자와 국가를 자극하고 훈련(discipline)하며,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xiii[13]}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 문제를 비교적 낙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국가의 능력, 국제관계에 미친 변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 현실주의자들의 관점^{xiv[14]}

그러나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진영에서는 전혀 상이한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상호의존이나 세계화라는 것은 자체적인 운동논리를 가진 힘으로서 독립변수라기보다 국제관계의 조건이나 국제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계대전, 대공황, 탈식민지화, 냉전 등의 국제관계의 조건, 그리고 국제체제의 권력배분 상태가 패권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상호의존이나 세계화 현상이라는 것이다.^{xv[15]}

예를 들어 길핀(Robert Gilpin)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국제 무역과 투자가 왕성해지고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되었던 것은 팩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적인 국제권력 구조의 반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우월적인 해군력과 해상로의 확보,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서 우월적인 기술과 경제력, 국제통화로서의 파운드화의 역할 등 영국의 패권적인 권력위상이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를 주도해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증진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이 증대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도의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월적인 군사력, 우월한 기술력에 근거한 경제적 힘, 그리고 세계통화 역할을 했던 달러화 등 미국의 패권적인 위상이 국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xvi[16]}

한 발 더 나아가 월츠(Kenneth Waltz)는 상호의존이란 개념은 불평등과 위계성이라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개념이라고 격하한다. 상호의존이란 상호간의 의존이 아니라 상호간의 취약성(vulnerability)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들간의 권력의 차이가 큰 국제관계, 특히 19세기처럼 다극체제가 아닌 20세기 후반의 양극체제하에서는 상호의존의 정도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상호의존이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중요하고, 국제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아니라, 19세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국제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xvii[17]}

이처럼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변수는 국제관계의 변화, 특히 국제권력 구조의 변화이고 상호의존이나 세계화는 환경적이고 주변적인 변수에 불과하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들간에 경쟁하는 게임을 벌여온 국제관계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시각이다. 근대국가와 근대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관계는 상호의존이나 세계화에 의해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xviii[18]}

3) 세계화와 국가의 힘

국제정치영역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이처럼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국제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권력배분의 변화가 오히려 세계화를 심화시키는 주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국제관계가 아닌 개별 국가 자체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비슷한 맥락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라는 것이 시장이나 기술발전의 추진력에 근거한 독자적인 운동논리를 갖춘 힘으로 국가나 정부는 이에 대해 방관자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주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계화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고 변화의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 입장에 서있는 학자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또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적인 틀이 존재해야 되며, 시장과 기업들은 그것들을 보호해줄 공권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xix[19]} 따라서 국가의 정치적인 의지와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화는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힘은 여전히 강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xx[20]}

예를 들어 헬라이너(Helleiner)는 1980년대 이후 국제금융의 세계화는 미국의 의도적인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건설자들은 원래부터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자유방임보다는 간섭주의적인 통제를 선호했었다. 국내경제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자율에 대한 통제능력을 가져야 했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xxi[21]} 또 그러한 믿음에 기반하여 전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역의 자유화와는 대조적으로 금융부문의 통제 위에 운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자국의 선도적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를 주도해나갔고 이에 영국이 적극 호응했으며, 유럽과 일본,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개방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나 시장력의 확산보다는 미국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추진의 결과였다는 것이다.^{xxii[22]}

이러한 주장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세계화 경향은 국가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역 방향으로 통제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결정에 따라 세계화의 정도는 약화되는 방향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방입된 시장의 위험

이처럼 대조적인 두 견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설명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간의 관계에 관한 질문과도 연계된다. 자유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시장력의 확대라는 경제적인 변수가 국제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고 변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있다. 그와는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적 변수가 시장력과 그로 인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심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 진영 모두 경제변수와 정치변수의 분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그 둘 중 어느 한 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중 어느 한 영역이 다른 한 영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국가와 시장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규정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관계에서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와 경제영역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시장간의 상호관계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가 역사적인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국제관계에 큰 변화가 초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 20세기초의 시기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입의 시대였다. 산업혁명이후 힘을 얻게 된 신흥 자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었다. 자기 조정적이고 완결적인 시장기능, 국제적 자유무역 규범, 그리고 국제통화의 자동조절적 작동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면서, 국내 노동자 등 약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는 무시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반 위에 1846년의 영국의 곡물법(The Corn Law)이 철폐되었다. 이로써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조치가 철폐되고 외국의 싼 곡물이 수입되자 수많은 농업인구가 도시노동자로 편입되었다. 곡물가가 저렴하게 되자 노동자들에게 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저임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화와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해오던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노동시장의 규제와 같은 각종 보호장치들이 제거되었다. 그 결과 도시 빈민 노동자들의 정치적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급진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대공황과 1, 2차 대전을 초래했던 것이다.^{xxiii [23]} 시장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보호장치를 동반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동시에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19세기말, 20세기초의 유럽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였다. 이는 자유무역과 투자를 국제적으로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복지국가 달성 노력을 용인해주는 두 가지 목표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전간기(戰間期, 1919-1939) 20년의 경험을 볼 때 세계경제가 블록경제화 하고 그러한 블록들 간의 경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보고 무차별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1차대전 이전처럼 국가가 국내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경험하게 되었던 혼란

을 보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장치와 고용증대, 그리고 복지국가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용인하였던 것이다. 러기(Ruggie)는 이를 「내재화(內在化)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이되 시장기능이 총체적 사회로부터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화하도록 만들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자하는 자유주의였다는 의미이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구 자본주의의 특징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아래 상호 의존과 세계화의 이득을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어느 선진국도 노동이 자유시장의 번영에 의해 좌우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도 적극 장려하였다.^{xxiv [24]}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들이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저성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 장치, 긴급구제장치를 지탱해나갈 재원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무역경쟁은 심화되고 금융규제 완화로 자본은 더욱 고삐가 풀려 자유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광범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낳게 되었다. 결국 비 숙련 노동자의 포화상태와 고 실업, 세 수입 감소, 국가재원에 대한 압박 증가 등의 현상을 낳았으며 복지국가의 해체가 시작된 것이다.^{xxv [25]}

1846년 영국의 곡물법의 폐지가 경제의 세계화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1980년대 초의 레건-대처리즘의 실현은 금융 세계화를 필두로 경제의 세계화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1846년의 곡물법 폐지가 영국의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반영했던 것처럼, 1980년대 레건-대처리즘 이후 세계경제의 추세는 월(Wall)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1940년대 후반이래 유지되어왔던 「내재화된 자유주의」가 1980년대이래 탈내재화된 자유주의(disembedded liberalism)로 전환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급기야 커다란 국제정치적, 또는 국제경제적 격변의 기반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세계화 현상에 의해 국제관계는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결코 자유주의자들이 갈파하듯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직선적인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바와 유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하는 순환주기(循環週期)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 보면 19세기 말의 자유방임적 방향으로의 시장기능의 방목(放牧)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정, 통제, 보완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정치경제적인 대 격변을 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국가 능력의 쇠퇴도 아니고 국가능력의 보존이나 강화도 아닌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의 변화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자들과 시민들의 관념(idea)의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가 순환론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의 여파가 국제관계라는 터에서 표출되는 양상,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계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 냉전종결과 국제관계의 변화

1989년의 독일 통일, 1991년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그리고 바르샤바 동맹의 해체로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오던 냉전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1945년이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으로 서방진영에 대결해왔던 공산권 진영은 그 중심국가인 소련과 함께 자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냉전 종결은 국제관계에 어느 정도의 변화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제적인 권력의 배분상태가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했을 때 우리는 한 국제체제가 다른 국제체제로 전환(system transformation)하였다고 말한다. 역사상 이러한 국제체제의 전환은 큰 전쟁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는데 1815년의 나폴레옹 전쟁과 1, 2차 대전이 전형적인 예였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영국주도의 패권적 질서가 형성되었고, 1차 대전은 그러한 영국의 패권에 대한 독일과 같은 신흥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차대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힘의 불안정 상태는 지속되었고 결국 독일과 일본이라는 도전세력에 의해 2차대전이 발발하였다. 2차대전이 끝나자 도전국들의 패망으로 생겨난 권력공백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질서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 그러한 냉전 권력대결의 한 축인, 소련이 그 동맹체제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체제의 전환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냉전종결로 인한 새로운 국제체제로의 진입은 나름대로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수천만 명의 인명 살상을 경험했던 과거의 경우와 달리, 국가들간의 전쟁이 없이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핵무기의 개발이 가져온 변화일 것이다. 주요 국가들간의 전쟁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인류의 종언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클라우제비츠(Clauswitz)적인 개념, 즉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이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호프만(Hoffmann)의 말대로 국제정치의 권력게임의 방식이 핵무기 군사기술에 의해 영향받았으며 이것이 과거의 체제전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양식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냉전 종결이란 사건은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경제적인 변화였다. 즉 과거 같으면 국가내부의 정치경제적인 모순이 심각한 경우 그러한 모순은 국제관계라는 수면 위로 나타나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의 외국과의 갈등과 전쟁으로 표출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핵무기로 무장 대치한 상황에서 소련이 내부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국제적인 군사적 갈등으로 표출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핵무기라는 무거운 돌이 꿰고 있는 물주전자의 뚜껑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소련의 내부 정치경제적 모순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의 외적 갈등과 전쟁으로 연결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연소하면서 자체붕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핵무기 시대에 새롭게 경험하는 체제전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적 성격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나 또는 국내 시민들의 항거에 의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다 보니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상당 정도 보장해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정치적인 민주화, 연방의 해체를 낳았으며 더 나아가 공산권 전체의 붕괴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이다. 세계화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도 냉전 종결은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세계화 현상의 심화가 자급 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채택해온 소련으로 하여금 체제유지 비용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하여 급기야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개혁 개방을 추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냉전종결은

세계화를 가속화하기도 했지만 세계화의 힘이 냉전종결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체제의 전환 방식의 독특성에 더하여, 그러한 전환의 결과는 국제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고 또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로 미국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유일한 군사대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1950년대나 60년대 냉전기에서의 패권적 지위와 영향력을 누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앞으로 패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많은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나갔던 방식의 제국주의적 리더십 행사를 원하지도 않고 있고, 또 소련이라는 주적(主敵)이 붕괴한 상황에서 그러한 방식의 리더십 행사에 수반하는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긴박성과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물질적 그리고 정치적 자원이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xxvi[26]} 따라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이지만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의와 비용 분담에 기반한 리더십 행사에 미국이 의존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는 운용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걸프전에서의 대응과 처리 방식은 냉전종결 이후 국제문제 처리의 한 전형(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질서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소련의 붕괴로 생겨난 국제적인 권력의 공백이 오로지 미국의 힘으로만 채워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유럽대륙에서는 통일된 독일이 이미 중부유럽에서 영향력 행사를 확대해오고 있다. 물론 독일 통일당시 나토(NATO)와 유럽연합 등에서의 충성스런 구성원이 될 것을, 그리고 유럽의 독일화가 아니라 통일독일의 유럽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했지만, 약속과 현실적 힘의 논리간에는 어차피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도 소련의 후퇴로 생긴 힘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의 상승하는 힘이 경쟁적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권력구조면에서 볼 때 미국주도의 질서이기는 하되, 독일, 중국, 일본 등 각 지역단위의 힘의 중심들이 형성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가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주도이기는 하되 다극적 질서의 성격이 중첩된 복합적이고 전환기적인 상황이 오늘날의 국제권력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독일, 중국, 일본 등 각 지역의 중심국가들의 상대적인 권력이 강화되는 경우, 국제관계는 1차대전 이전의 유럽과 같은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측면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는 오늘날 국가들간에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세기의 민족주의와는 달리 국가들이 무력갈등을 초래할 정도의 적대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 둘째로 1세기 전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었고 대부분의 대국들이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xxvii[27]} 오늘날의 경우는 칸트(Kant)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철학적 근거가 되고 있는 명제, 즉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국내 제도적 억제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경제적인 번영의 구가로 19세기에 비해 국제분쟁의 사회적, 정치경제적 원인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구조면에서 다극화 경향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9세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냉전의 종결로 국제권력구조는 바뀌었지만 냉전시 국제정치를 경영해왔던 원칙이나 기구는 여전히 탈냉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대전이후 미국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목표는 앞에서 언급한 전간기(戰間期)의 경험, 즉 공황, 세계경제의 배타적인 블록화, 그리고 이들간의 차별적인 경쟁심화가 급기야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제공했던 경험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무역과 투자에 기반을 둔 세계경제의 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보장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허락하는 이른바 내재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서방세계는 협력적으로 세계경제를 공동 경영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이의 제도적인 표현이 브레튼우즈 체제와 GATT,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며 더 나아가 국제연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적 경제 질서에 대한 공산진영의 위협에 정치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방식이 나토나 미일간의 정치 군사적 동맹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냉전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이러한 서방의 경제질서관에 입각한 원칙과 제도,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 안보적 장치로서의 나토, 미일안보동맹 등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xxviii[28]} 오히려 정치경제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존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흡수 편입되고 있으며 동구권 국가들도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 등을 통해 기존의 국제정치질서의 운용의 원칙과 규범 속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권력구조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1940년대 구축되었던 경제, 정치, 군사 질서의 틀은 계속되고 있고 탈냉전 세계질서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냉전 종결이후 세계질서는 전간기(戰間期)때처럼 지역 블록 구도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하는 견해도 있다. 물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통합이 심화되어왔고, 북미지역에는 북미자유무역시대(NAFTA)가 결성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의 경향이 1930년대의 배타적인 블록경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와는 달리, 브레튼우즈 체제의 제도적 유산들이 아직도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물론 무역 블록의 배타성의 강화를 막고자 하는 GATT 24조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GATT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강화되어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무역 증대를 촉진하고 있다. 투자면에서도 지역중심의 투자 못지 않게 전지구적 차원에서 대규모 기업들간의 상호연계와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면에서도 지역단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자본이동이 오늘날 세계경제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내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블록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배타적 블록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은 유럽지역에는 나토를 통해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는 미-일, 한-미 안보동맹을 통해서 각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 안보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주도적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세계질서가 경제적, 군사 안보적으로 배타적인 블록화로 나아가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마도 냉전의 종결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쟁의 양상에 있어서의 변화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 국가들간의 전면적인 무력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확산, 경제적 변영의 구가가 그 원인이다. 그러나 그

러한 전면적인 국가들간의 무력분쟁대신 민족, 인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유고사태나 러시아의 체첸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45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냉전기 동안에는 민족들간의 통합과 분열은 이데올로기와 무력의 힘에 눌러 최소화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소수의 경우에도 그것은 주로 탈식민주의(脫植民主義)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민족간의 통합과 분열은 이제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예멘과 독일, 그리고 최근 홍콩과 마카오를 통합한 중국의 경우가 민족 통합의 사례였다면 과거 다민족국가이면서도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분열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소련, 유고, 에티오피아, 체코슬로바키아가 대표적인 예이고 이러한 분열의 결과 냉전 종결후 짧은 시간 내에 20여 주권국가가 새로 등장했다. 이러한 분열의 경향은 과거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유럽이나 아프리카, 인도의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xxix[29]}

4. 결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의 국가

세계화의 심화와 냉전의 종결은 국제관계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때 19세기와 같은 중요 국가들간의 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분쟁은 사회경제적, 인종분쟁적 성격을 띠면서 내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의 레건-대처리즘의 시행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이냐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유화 조치들로 인해 사회적 보호를 위한 규제는 풀려나가면서 사회복지가 약화되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의 주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산업부문의 단순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화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갈 때 이들의 불만은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불안정 요인을 감당할 제도적 차원의 관리(governance)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가 1997년 시작된 동아시아 위기가 1998년도에 전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단기성 투기자본의 횡포와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미국, 일본, 독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국제금융체제의 보안을 위한 노력은 실패하였다. 결국 대공황의 우려까지 나오게되는 심각한 국면이 진행되었다. 금융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환경의 파괴, 인구 문제, 노동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국제적 관리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9년 12월초 세계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 라운드가 시애틀에서 개최되었을 때 벌어진 폭동사태, 그리고 2000년 초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열렸을 때의 소요는 의미심장한 사건들이었다. 시장 기능이 정치력에 의해 국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보완되지 않고 마술 향아리에서 풀려난 지니처럼 자유 방임될 때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전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아직도 국가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국가의 무력화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대안적인 주체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헌팅턴(Huntington) 교수는 다가오는 국제정치질서가 문명대 문명의 충돌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xxx[30]}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과 세계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문화라는 것이 고정 불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는 다분히 일면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문명권에 속하더라도 국가이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의 문명에 대한 귀속감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소속감이 훨씬 강할 것이다. “문명이 국가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문명을 컨트롤하는 것이다.”^{xxxi[31]}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는 주체로서 사회세력을 지목하는 학자로서 콕스(Robert W. Cox)를 들 수 있다. 그는 세계화 현상의 심화로 빈부의 격차, 약자의 소외, 사회적 통합의 해체 등 사회불안정이 심화되는데 국가는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주장한다.^{xxxii[32]} 그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래 전개되어온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기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사회세력을 지목한 것은 막연한 느낌을 준다. 어떻게 사회세력들이 국가를 건너뛰고 세계적으로 연대하여 힘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해나가는냐 하는 문제, 즉 “어떻게”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통합을 보거나 최근 국제적인 환경 레짐의 출현을 보아도 사회세력들이 국가를 추월했다기보다는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국가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xxxiii[33]}

물론 그러한 국가는 결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국제부문과 국내부문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며 변화시켜나가는 주체로서의 국가는, 스스로의 내용도 변화시켜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나갈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국가는 세계화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문명권이나 사회세력과 비교해볼 때 아직도 확고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정치적 지배자들은 국가라는 명분 위에 서서 피 지배자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있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향유하고 있는 정당성과 정체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충성도를 능가하는 다른 대안으로서의 보편적 행위주체가 가까운 시간 내에 등장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xxxiv[34]} 결국 기존의 국가 단위를 기초로 하여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떠한 관리(governance)의 틀을 마련하고, 세계화와 탈냉전 이후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저자소개:

윤영관 (尹永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조교수. 주요 저서로는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공편), 『국제기구와 한국외교』(공편)가 있음.

<주>

^{i[1]}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는 편의상 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상업적 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ism)로 아담 스미스의 영향을 받아 개진되어 온, 국가들간의 상업적 교류증진은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국가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민주적 자유주의

(democratic liberalism)로 칸트의 영향아래 우드로 윌슨 등이 주장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자유주의(institutional liberalism)는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등 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주로 상업적 자유주의의 흐름을 의미하지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시장의 확산이 가져오는 정치적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글로벌리즘(globalism)이라고 불리는 시각과도 중첩되는 점이 있다.

ii^[2]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세계화(globalization)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호의존의 누적적인 심화가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즉 질적인 차이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iii^[3] Norman Angell,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s of Military Power in Nations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 (New York: Putnam, 1910).

iv^[4] Raymond Vernon,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1), p.3.

v^[5] Edward L. Morse,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3, No.2 (Spring 1969), pp.311-26; Richard Cooper, *The Economics of Interdependence: Economic Policy in the Atlantic Community* (New York: McGraw-Hill, 1968).

vi^[6] Stanley Hoffmann, *Gulliver's Troubles, or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McGraw-Hill, 1968).

vii^[7]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viii^[8] Kenichi Ohmae, "Putting Global Logic First," *Harvard Business Review*, Vol.73, No.1 (1995), pp.119-25.

ix^[9]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Century Capit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p.3.

x^[10] P.G. Cerny,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Finance," in P.G. Cerny, ed., *Finance and World Politics: Markets, Regimes and States in the Post-hegemonic Era* (London: Aldershot, 1993), p.13.

xi^[11] A. Hurrell and N. Woods,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in *Millennium*, Vol.24, No.3 (1995), p.448; James N. Rosenau, *Along the Domestic-Foreign Frontier: Exploring Governance in a*

Turbul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221.

xii[12] James Rosenau, "Imposing Global Orders: A Synthesised Ontology for a Turbulent Era," in S. Gill and J.H. Mittelman, ed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225-26.

xiii[13] Kevin R. Cox, "Introduction: Globalization and Its Politics in Question," in K.R. Cox, ed., *S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New York: Guilford Press, 1997), p.2.

xiv[14] 현실주의(realism)이론의 대체적인 특징은 국제관계를 기본적으로 홉스(Hobbes)적인 무정부 상태(anarchy)로 규정하는 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의 국가목표는 안보(security)이며, 그래서 권력(power)이 국제관계 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된다.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고, 국가는 국가이익의 달성을 위해 합리적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로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xv[15] Ian Clark,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9.

xvi[16]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Inc., 1975).

xvii[17] Kenneth Waltz,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Cambridge: M.I.T. Press, 1971), pp.205-23.

xviii[18] Clark, 앞의 책, p.47.

xix[19] Clark, 앞의 책, p.46-47; Paul Hirst and Graham Thompson, *Globaliz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1996), p.188.

xx[20] Linda Weiss,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Governing the Economy in a Global Er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p.13.

xxi[21] Eric Helleiner, "From Bretton Woods to Global Finance: A World Turned Upside Down," in R. Stubbs and G.R.D. Underhill, eds., *Political Economy and the Changing Global Ord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p.163-64.

xxii[22] Helleiner, 앞의 논문, pp.166-67.

xxiii[23]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57)을 참조.

xxiv^[24] Ethan B. Kapstein, "Workers and the World Economy," *Foreign Affairs*, Vol.75, No.3 (May/June 1996), p.20.

xxv^[25] Kapstein, 앞의 논문, p.21.

xxvi^[26] Richard N. Haass, "What to Do With American Primacy," *Foreign Affairs*, Vol.78, No.5 (September/October 1999), pp.37-38.

xxvii^[27] Fred Halliday, *Re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1994), p.222.

xxviii^[28] G. John Ikenberry, "The Myth of Post-Cold War Chaos," *Foreign Affairs*, Vol.75, No.3 (May/June 1996), p.90.

xxix^[29] Halliday, 앞의 책, p.221.

xxx^[30]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72, No.3 (Summer 1993), pp.22-49.

xxxi^[31] Fouad Ajami, "The Summoning," *Foreign Affairs*, Vol.72, No.4 (September/October 1993), p.9.

xxxii^[32] Robert W. Cox,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Choices," in Robert W. Cox with Timothy J. Sinclair, *Approaches to World Ord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191-208.

xxxiii^[33]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서울: 신호서적, 1999), p.22.

xxxiv^[34] 윤영관, 위의 책, pp.22-23.